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민영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규제해왔던 29개의 지침을 폐기하고 개별 학교가 알아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학교 운영에 있어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라 마리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분명 좋은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막상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이런 '학교 자율화 조치'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연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열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학교 입시지옥화 조치'를 철회하려며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왜 '학교 자율화'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인가?

그 배경에는 교육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제목과 내용이 한참 어긋나 있고 포장과 알맹이가 완전히 다르다는데 있다. 4·15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한참 들여다보아야만 '학교 자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과는 달리 이 방침이 학교를 과거의 낡은 관

행으로 되돌리자는 조치이며, 학생들을 획일적 입시경쟁으로 몰아가는 입시몰입 정책에 다른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령, 과거 한 때 시행했던 '우열반'에 대한 규제를 끝나고 하면 대다수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공부 좀 하는 학생의 부모라

학교자율화 조치 과대포장 말라

하면 'SKY 입시반' '특목고 준비반'을 만들자는 요구가 왜 안 생기겠는가? 그런데 '우반'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모든 학생이 우반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이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어 교육이 더 충실히진하고 하지만 내 자식이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결국 우열반 편성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반에 들어가기 위해 한층 더 사교육에 목매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리는 돈 내고 나아이만큼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인지상정 아닌가?

사설모의고사 금지도 끝나고 하는데 사설업체들의 시험을 보려면 학생당 9천원의 응시료를 내야 하고 이중 1천500원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던 지침을 폐기하면 당연히 대다수 학교에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학교별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별 성적을 따져 재정지원도 달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당이니 이렇게라도 해서 학교성적을 올리려 할애이 되지 않겠는가? 아침밥도 못챙겨 먹고 학교 가서 밤 12시나 되어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츠는하기 그지 없다.

총지나 찬조금을 금지하던 지침도 '자율적'으로 폐기하면 촌지 수수 관행, 찬조금 강요 관행이 되살아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위 '지침'이 버젓이 살아 있을

학교로 돌아간다고 한다.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을 금지하던 것도 규제를 풀면 한 달 구독료 3천500원 중 600원 정도가 학교로 돌아온다고 한다. 학습부교재 선정과 관련된 지침이 사라지면 부교재 선정에 따른 약 20%대의 리비트가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 이를 마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당연히 '학교 자율화'는 이 모든 것의 부정적, 일탈적 관행들의 '복고'와 '성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연컨대 '학교 자율화'는 그 포장과 달리 알맞이는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사들에게는 암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량정책이다. 현행 법에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학교 자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포장의 미학' 품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은 속이는 '허위과장광고'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인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신정훈



최근 '경제효과 부풀리기 의혹'으로 시작한 혁신도시 문제는 지방의 거센 저항을 거쳐면서 '보완해서 계속 추진' 수준으로 마무리되며 가는 것 같다. 지방의 반발이 불을 보듯 한데도 왜 이 문제를 이슈화 했을까? 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함께 뛰웠을까? 과연 정부는 혁신도시를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주지하듯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즉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신도시 건설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선진국인 프랑스나 영국처럼 공기업을 지방에 보내 대학과 연관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

면 당장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행정기관부터 민영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내세운 혁신도시 재검토의 근거논리는 또 어떤가?

경제효과를 4조로 부풀렸다는데 수도권의 교통혼잡 12조, 대기오염 10조 등의 사회비용을 감안하면 이게 단순한 수치로 재단할 일인가?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다지만 수준 높은 교육, 의료, 주거기능을 갖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원가 비교는 의미가 없고 이미

기고

조기성



자연 여건을 활용한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동북아의 숨겨진 진주라 불리는 광양만구는 화학·철강 등 굵직한 산업으로 자체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3대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대불공단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선박이 건조되고 해양지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들 산업이 상호 연계되고 고도화를 위한 지원과 연결된다면 전남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하거나 시간 제약이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기관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의 애로사항에서 시험, 해외 진출 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전남에 있는 한 기업은 KTR의 시험·컨설팅으로 삼총효과와 함께 생분해되는 농업용 필름 개발에 성공해 실험실 규모에서 연간 1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앞으로 KTR은 광양만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이 한 차원 더 성장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법적 허가기준이 되는 자료 제공은 물론 고부가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지켜라

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자는 목적이다.

이 정책은 지역간, 계층간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확정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의 중요 정책인 '공기업 민영화'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정부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방이전을 강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민영화를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하여 특정기업이 인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외국의 예에서 보면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 즉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창의'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일이다.

공공성을 포기하고 효율성만 따지자

국토해양부는 기업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초장기, 초저자 국가 임대산단' 조성이라는 대안을 마련중이라 문제될 일이 아니다.

가족동반 이주할 공기업 임직원수를 부풀렸다는 나주시로 이전할 핵심기관이 2007년 3월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가족 동반하여 이사하겠다는 직원이 47%, 여전이 개선되면 하겠다는 직원이 78%로 2005년 비해 임직원들의 지방행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국가의 권력과 자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이제 결론은 확실하다. 현명한 정부라면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 즉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창의'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양만권의 기존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남서해안의 해양 및 농업·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많이 구축됐으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은 구축된 인프라와 기업 간에 밀접한 협관관계를 갖지 못해 인프라도 자립이 어렵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로 민간 성격의 기업 지원 기관들이 직접 기업 지원에 나서 기술개발, 산업체, 고부가가치화 등을 이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은 올해로 39년이 된 시험·컨설팅 기관으로 미국의 UL, 독일의 TUV 등 국제적인 시험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유럽에 진출할 때 제약이 되는 CE인증을 쉽게 해결해 주는 등 기업이 힘들

치화 및 수출을 위해 인증에 필요한 임상실험을 제공한다. 또한 남해안을 따라 오리엔트조선과 SNC해양조선 등 조선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적합한 기능성 페인트의 시험·기술을 지원하여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등 지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KTR은 매년 2만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시험·컨설팅 기관으로 오는 25일 전남지역 기업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 광양만권지원의 문을 연다. 앞으로 지역기업의 성장에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양만권과 융산지역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부품 등 산업 여건이 유사하지만, 융산시는 KTR을 유치해 기업과 KTR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정착시켰다. 전남지역도 KTR 광양만권지원이 발전해 기업과 KTR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온라인 취업서류 양식 통일했으면

요즘은 취업지원 서류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글씨로 쓰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지도 않는다.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해 전송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

하지만 회사마다 너무나 양식이 달라 불편하다. 회사의 업종과 전략 비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나 순서가 다른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입력 시작부터 저작, 전송 등 서류 작성 과정이 너무 달라 컴퓨터 전문가조차도 자칫 실수하면 이전에 작업했던 것이 모두 지워져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보내준 서

류 종에 이력서는 제대로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알맹이가 없고 양식만 덜렁 있다며 새로 보내내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경우엔 입사지원자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줘서 입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나마 연락조차 안해주면 그대로 탈락이다.

또 다른 회사는 특정 항목의 내용을 적어 적으면 단어 숫자를 인식해 저작이나 전송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입사지원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 입력 시작부터 끝난 후 전송까지 순서와 절차 만큼은 어느 정도 통일하면 어떨까.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촌동

부동산 계약 때 당사자간 반드시 계약서 확인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아파트보다는 전세·월세가 많은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집 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 업무를 맡겼다고 하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와 1억원에 계약했다며 월세금 1천만원 준다. 물론 계약서도 월세로 구했다. 당시인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모르는 터라 감쪽같이 속고 만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밀집지역에서 전세를 얻는 서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중개업자를 전세로 믿을게 아니라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 계약해야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권운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설

광주, 亞 '비엔날레 전쟁'서 최고 군혀라

을 가을 아시아에선 총성 없는 미술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9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11월 9일)를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만 7개의 대규모 국제 미술 행사가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준이 떨어지거나 비난받을 위험하는 양상이다.

문화예술은 21세기 지역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사람들을 단시간에 끌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미술 행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대도시가 국제 미술 행사에 총력을 쏟는 이유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비엔날레 전쟁'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 지난해 '신정아·천강복파문'으로 한때 흔들리기도 했으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최대 라이벌인 상하이는 유럽의 스타급 매니저 2명을 공동 개최를 위해 광주시, 지역문화예술단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비스수지 적자 2년 연속 세계 3위라니

우리나라의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5억8천만달러로 지난 2006년 189억6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보아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독일과 일본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28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적자 규모가 큰 관광과 교육을 비롯 의료, 레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 붙는 세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주진된다.

문제는 규제 완화의 폭과 내용이다.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과중한 세금이 해외관광을 부추긴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 전복대'를 뽑기로 한 만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無等鼓

한우에 등급이 도입된 것은 1995년부터다. 처음에는 4단계였으나 2004년 1+1+1+ 추가돼 1+, 1, 2, 3 등급의 5단계가 됐다. 때문에 1등급 한우 고기만 사용한다는 선전 문구는 자칫 소비자들을 혼혹시킬 수 있다. 1등급이 1등이 아니라 5등급 가운데 3등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한우라도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간 가격 차는 6배에 달한다.

등급은 근육 내의 지방도와 고기 색깔 등으로 평가된다. 지방이 끊어져 퍼져 있는 '마블링'이 잘 되고 고기가 높은 등급을 받는다. 등급과 벌금을 받는다.